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인류평화의 적

다양한 문명권의 존재 인정하고 상생의 길 모색해야

김성주 |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1990년대 후반, 냉전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문명과 야만의 이중 이데올로기는 민족 · 인종 · 종교 · 문화라는 이름을 빌려 진행중이다. 이제 다양한 문명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의 평화는 선 · 후진국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구적 사고' 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초강대국들에 의해 형성된 강압적 작동메커니즘이 해체된 이후 세계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자행되고 있다. 미 테러사건으로 이제 문명충돌의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는 갈등, 대립 그리고 전쟁을 통해 인간존엄성의 황폐화를 경험했다.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아직도 전쟁의 가능성 속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다. 핵무기, 생화학 무기의 확산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는 왜 갈등과 불신의 벽이 상존하고 있는가? 왜 인류는 전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평화를 위한 논의는 한낱 이상적인 담론에 지나지 않는가? 이 글에서 필자는 민족 · 인종 · 종교 · 문화 · 이데올로기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평화로운 상생의 세계를 논의해 본다.

서구적 가치와 문화적 자만심으로 약소국 침탈해

전쟁의 원인에는 민족 · 인종 · 종교 · 문화 등 원초적 문제부터 정치 · 경제 · 사회 · 심리적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밑바닥에는 문명과 야만의 이중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추동한다. 이런 이중성은 인간행위를 정당화하고 수많은 인간들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 속에 내포된 문명과 야만의 이중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서구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척도로 국제사회를 바라보고 경영해왔다. 여기에는 서구적 가치와 문화의 자만심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던 민족들은 서구 기술문명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흥망성쇠의 열쇠는 기술력과 동일시됐다. 처절한 '정글의 법칙' 만이 유일한 생존 이데올로기였는지도 모른다.

제국주의 시절 서구 국가들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기독교 문화로 채색된 제국주의는 후진지역을 계몽 혹은 말살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자원과 노동력을 통한 경제적 잉여가치의 수탈이었다. 식민지역의 효과적 경영을 위해,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은 이 지역의 상부권력층과 결탁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 내지는 확대해나갔다. 후진지역은 전통과 근대라는 이중구조로 분화되고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황폐화했다. 후진지역의 문화는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에 편입되거나 천박한 문화로 생존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힘의 전이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영향권을 유지하면서 제국주의 시절 유럽국가들이 자행했던 문명과 야만의 이중적 행태를 재현했다. 양 초강대국에 의해 약소국들은 이념적, 영토적으로 분단되거나 통합됐다. 약소국들은 극단의 양대 서구문화로 편입됐다.

냉전 종식 후 민족 · 인종 · 종교 · 문화적 갈등 깊어져

1990년대 후반, 냉전 이데올로기의 논리와 가치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면서 약소국들은 민족 · 인종 · 종교 · 문화적 갈등과 전쟁이라는 값비싼 희생 속에서 해체와 통합의 진통을 겪게 된다. 이는 약소국들이 냉엄한 생존 이데올로기에 적응해야만 함을 의미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 속에 내포된 문명과 야만의 이중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사진은 독일 뮌헨에서의 무솔리니(왼쪽)와 히틀러.

중동, 동티모르, 코소보, 아프리카 등은 약소국의 생존 논리를 시험하는 장이었다. 인위적인 굴레가 벗겨지면서 현재 세계도처에는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중 이데올로기가 민족 · 인종 · 종교 · 문화라는 이름을 빌려 진행중이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지난 수세기 동안 서구 국가들에 의해 채색된 질서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해되는 그런 세계는 분명 아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지구촌 시대에 발을 디뎌놓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문명의 급속한 신장은 국가간 상호의존도를 빠른 속도로 확장시키고 있다. 주권은 궁지에 몰리고 국가간 민감성과 취약성이 증대하고 있다. 비록 국가가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존속하고는 있지만 초국가적인 조직과 단체들의 영향력 증대를 부정할 수 없게 됐고, 인적 · 물적 교류의 확대, 시공적 개념의 축소, 세계사회의 일일생활권화 등으로 국가들의 행위패턴이 변하고 있다. 갈등, 대립, 전쟁보다는 화해, 협력, 평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보화가 문명의 동질성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문제는 아직도 힘의 잣대를 통한 현실주의적 논리가 국가간 관계의 밑바탕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문명을 앞세운 서구 강대국의 파상적 공세는 약소국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유린하고 있다. 서구적 가치와 제도의 우월성이 무차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침투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정보화'는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압도적인 선진 기술력은 다시 문명과 야만의 이중구조 속으로 국가들을 몰아넣고 있으며 냉혹한 '정글의 법칙'을 실감케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국가들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로부터 직 · 간접적으로 문명의 동질성을 강요받고 있다. 세계가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지향하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사회에 평화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항상 불안정하고 불분명하다. 이는 인간본성의 이중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의 맛을 본 이후 인간세계의 불평등은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몸에 옷을 걸치면서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으며 좀더 많은 탐욕을 위해 '정글의 법칙'을 체득해왔는지도 모른다.

지구적 사고 바탕으로 평화 추구해야

많은 학자들이 자본과 정보기술을 통한 국제사회의 통합과 평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본과 정보기술이 인류를 하나의 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신념이 오늘의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 한쪽에 풍요로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하루에 1달러도 안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구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불평등 구조가 치유되지 않는 한 갈등은 심화될 것이고 이는 전쟁을 유발시킬 것이다.

또한 하나의 지구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인식이 결여되는 한 국제사회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공동의 가치와 동질화된 문화로 통합하려는 노력 역시 또 다시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상대적 문명권의 존재라는 엄연한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 세계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 다양한 문명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문명의 절대성을 강조할 수 없다. 각각의 문명권은 자신들의 고유 가치와 질서를 갖고 있다. 기독교 문명만을 최선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인류는 과거 절대적인 가치와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과거의 억압적 논리가 다시 강요된다면 이는 또 다른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규범적 논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규범의 수준을 높이고 현실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우리는 '상생의 세계'를 도출해야 한다. 인류가 더불어 사는 규범의 가치를 더 많이 공유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류의 존엄성을 보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극적인' 평화의 개념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는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힘의 축적'을 통한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평화는 선 · 후진국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김성주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정치학》《동남아의 정당정치》《대외정책론》《한국현대정치사》 등이 있다.